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6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2월 13일 (음력 1월 9일) 수요일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계획수립 본격화

### 이전 업무 협약체결 미래셋대우, 용역사 선정 협의 절차 진행 중 광산구도 공장부지 포함한 ‘송정역세권 발전방향 수립 용역’ 발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이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가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공장부지 자산 가치 평가와 활용 방안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과 공장이전'을 위해 지난 달 16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미래셋대우

와 본격적인 용역사 선정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용역은 금호타이어가 광주시, 광주광산구와 향후 광주공장 이전과 부지 개발방향을 놓고 진행하게 될 협의에 필요한 회사 측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된다.

금호타이어는 미래셋대우와 업무 협의 절차가 마무리 되는 즉시 전문 용역사 선정

을 마치고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안은 최소 3가지 모델안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39만6694㎡(12만여평)에 달하는 광주공장 부지에 대한 개발가치를 포함한 자산평가와 이전 장·단점 분석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용역안이 확정되면 광주시, 광주광산구와 공장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광주광산구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이전에 대비해 송정역세권 발전안을 포함한 용역을 지난해 11월29일 발주했다.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진행 중인 '광주송정역세권 발전방향 수립용역'은 오는 3월2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와 광주광산구가 발주한 용역안 수립이 완료되더라도 실제 공장 이전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주공장 이전 이후 부지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할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

할지도 남은 과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광주송정역과 인접해 있다. 이 일대는 광주시와 광산구가 지역경제 거점형 KTX투자선도지구'로 개발할 계획인 가운데 부지가치가 높은 부지로 주목 받고 있다.

KTX투자선도지구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 점에 주목하고 개발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본거지가 될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고, 현 공장 부지를 광주송정역세권 부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광주시와 LH는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상업지구와 융복합(산업+업무+주거+상업) 지구를 연결하는 교통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빛그린산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미래셋대우와 추진 예정인 용역은 광주시, 광산구와 공장 이전 협의를 위한 회사 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와 진행될 협의는 완료 예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장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 어이없네

홍의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자유한국당 유력 당원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의 박영수 특검 연장 가결' 발언을 두고 "황 전 총리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9일 유명 변호사의 폭로로 배박(배신한 친박) 논란이 불거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고 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불어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권한대행까지 수행한 사람이,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였다"고 침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 = 뉴스시



## 오월·시민단체 “5·18 왜곡 처벌할 법 제정” 촉구

### 김진태 의원 방문한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서 항의집회

5·18민주화운동 왜곡 공청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광주를 찾은 12일 오월단체·시민단체가 5·18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5·18구속부상자회·광주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40여 명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5·18 역사를 왜곡·왜곡하는 세력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극우세력과 한국당은 부모와 형제, 처자식을 잃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5·18희생자와 유족들을 매도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면 안될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와 독일은 홀로코스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역사 왜곡·왜곡 세력을 처벌할

법 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오월영령과 유공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뜻을 계승해야만 군사독재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민주적 발언을 일삼아 5·18유공자와 유족,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태극기 부대의 표에 호소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득표율을 얻기 위해 5·18 영령과 유공자 유족들을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을 방문했다.

김 의원 일행이 탄 차량이 당사 앞에 도착하자 오월단체 일부 회원들은 차량 진입을 막고 선 채 항의피켓을 들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때 집회 참가자와 한국당 지지자



12일 광주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에서 김진태 의원이 당원과 간담회를 열기 직전 일부 5·18,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들 간 크고작은 승강기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8일 김 의원 등이 주최해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에서는 극우논객 지만원 씨와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5·18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해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홀로코스트법) 발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신봉우 기자

「광주교육 청렴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광주광역시교육청

# The 청렴하기-면

## 행복해요!